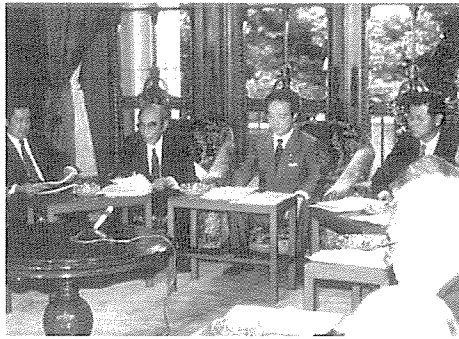


▶ 1990년 6월 22일 당시의 가이후도시키(海後俊樹)수상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회의 본회의



日本 見聞記 ◀▶

일본 사람들은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부기관의 경우도 남의 도움말을 듣기 위해 많은 자문기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자문기관들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고 거의가 뚜렷한 의도를 가진 질문에 만족을 줄만한 답신을 보내고 있다.



李鍾秀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사무라이(武士)의 후예답지않게 일본 사람들은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을 단칼에 베듯 결정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정부기관의 경우 남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자문(諮問)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자문기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위는 수상(총리)으로부터 아래는 국(局)의 총무과장에 이르기까지 자문기관을 운영한다. 매년 행정기구도(行政機構圖)라는 웬만큼 두꺼운 서적이 행정관리 연구센터라는데서 편집, 발행되고

있다. 거기를 보면 총리부에 수십 개가 있고 각 성청(省廳)마다 적지않은 자문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公的)인 자문기관이다. 수상, 대신 또는 장관, 국장, 국의 총무과장이 「밝은 21세기를 위한 간담회」니 어찌니하는 이름을 붙인 사적(私的)자문회의를 만들어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들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문기관 많기로는 일본이 세계 제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그나라는 자문기관 천국이다.

정부 부서마다 자문기관

그런데 수상이나 대신 및 장관이 운영하는 자문기관에 학식있고 덕망있는 유력자, 권위자가 참가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국의 총무과장의 사적 자문회의에 사계 권위로 존경받는 유명대학교수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공적·사적 자문기관들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고 거의가 뚜렷한 의도를 가진 질문(자문)에 만족을 줄만한 답(답신)을 주는 유명유실한 기관이라는 사실이다. 공적 자문기관의 경우 성격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것도 흥미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주일과학관의 직책상 정부의 자문기관에도 가끔 드나들게 마련이었다. 과학기술회의,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총리부 소속이면서 상근의원이나 위원, 그리고 사무국이 과학기술청에 소속된 자문기관을 많이 찾아 보았던

셈이다. 과학자들이 선출한 2백10명의 과학자로 이뤄진 일본학술회의도 간혹 방문하곤 했다. 그곳은 일본의 과학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한편 총리부에 소속돼 총리나 정부기관의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일본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구조심의회라든가 산업기술심의회 등 통상산업대신 자문기관에도 드물지만 답신(答申)자료 같은 것을 부탁하러 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문기관이 오래 유지되고 권위를 갖는 까닭은 실질적인 최고정책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학술회의는 1949년에 연합군점령시대 GHQ(연합국총사령부)의 과학기술자가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 발족시킨 곳인데 권위에 어울리게 알맹이 있는 활동도 많이 하는 곳이다. 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청 발족에 뒤이어 3년 뒤인 1959년에 일본학술회의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료기구에 밀착하는 자문기관으로서 총리부에 설치되어 지금에 이르는 동안 일본과학기술정책(인문·사회는 일본학술회의가 분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20여차례의 답신을 했다. 그중에는 1986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정책대강(科學技術政策大綱)」의 바탕이 된 것도 있다.

과학기술청에 사무국을 둔 수상의 자문기관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대표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과학기술회의의 의장은 수상이다. 그러나 사람은 같아도 직책이 다르니까 업무상 혼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청 장

관이다. 그러나 실제 권한은 수석위원이 맡는 원자력위원장대리가 행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위원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맡는다.

자문 답신기간 1년 걸리기도

과학기술회의를 예로 보면 자문에서 답신까지 수개월부터 1년반 정도 걸리고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수상으로서 동일인인 과학기술회의 의장에게 자문을 하고 심의 작업이 끝난 다음 동일인이 의장으로서 동일인인 수상에게 답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이다. 1년 이상 재직하다가 수상이 심의도중에 그만두는 수도 있었으니 그럴때 자문할 때와 답신할 때의 이름이 다르게 된다.

과학기술회의 조직은 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와 과학기술청 장관이 주재자인 운영회의 그리고 과학기술청 과학기술정책국장(주무국장)이 간사장으로서 주재하는 간사회가 있고 거기에 종합계획부, 정책위원회, 자문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부 등이 있다. 조직이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다. 동회의의 구성인원을 보면 수상이 의장이고 대장, 문부 등 양대신과 경제기획청과 과학기술청의 양장관 그리고 일본학술회의 회장 등 5명이 당연직 의원으로 돼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승인을 얻어 수상이 임명하는 5명의 학식·경험자를 합쳐 모두 11명이다. 5명의 의원은 재계, 학계, 실업계 대표와 상근의원 2명이다. 과학기술회의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은 2명의 상근

의원인데 보통 동경대학(東京大學)이나 경도대학(京都大學)총장 출신(과학기술계일 경우)과 과학기술청 차관 출신(과학기술계)이 임명된다.

자문18호 「신세기로 향해 취해야 할 과학기술의 종합적 기본방책에 대해서」에 대한 답신을 예로 보면.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찍어 36쪽 분량의 답신을 만드는데 약 1년6개월(1990. 6. 22~1992. 1. 24)의 시일과 1개 위원회(13명), 1개 부회(30명), 1개 부회의 2개 종합분과위원회(19명과 15명), 1개 부회 1개 분과위원회의 2개 소위원회(18명과 18명)의 1백13명의 의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짜서 지혜를 제공했던 것이다. 약 1백명의 전문위원은 하나같이 학계, 재계, 실업계에서 알아주는 명사들인데 모두 42회의 회의를 가졌다고 기록에 나타나있다. 그렇게 시일과 공을 들인 답신이기에 정책으로 반영돼 그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언젠가 어떤 계획과장(주무과장)에게 과학기술회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비결을 물어보았다. 능력있고 학식있는 2명의 상근의원과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의 활동적이고 실력있는 주사(主査)들과 기록에는 안남지만 계획과의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무관의 직원들이 전문위원들과 힘껏 일을 할 수 있게 땀흘려 대소 각위원회를 중단없이 운영하는데 비결이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그 과장은 대답했다. ④7